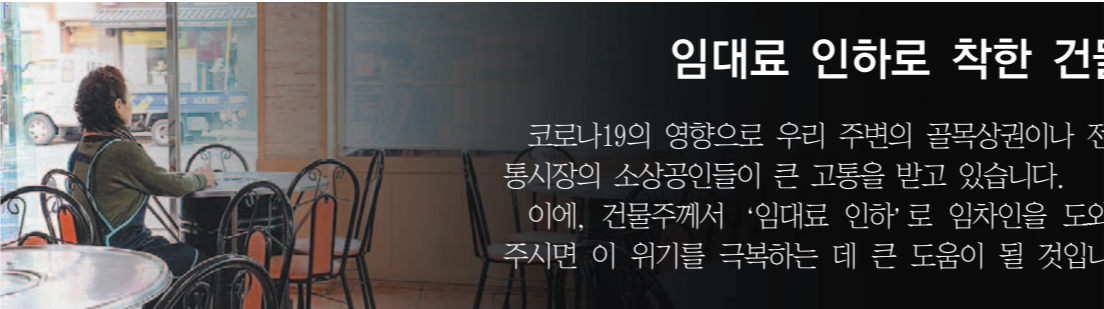


코로나19 여파로 비량 끝에 선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동백전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기간이 3월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대응 4차 민간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10% 캐시백 이벤트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캐시백 혜택은 6%로 준다.

동백전은 부산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형생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백전 카드 결제 시 30%의 연말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꿈꾸고, 배려하는 행복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달 전 중국에서 폐지가 시작된
신종 감염병으로 동네 상권이 바다를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불안전
은 소비심리를 공포 얼어붙게 해 내수
경기에 치명상을 입혔다. 나라에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사람
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때문인지 작년
연말, 우리 식당에는 회식 손님이 거
의 없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거
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코로나19 사태
로 식당 매출이 확 떨어졌다. 사람들
이 모이는 장소를 꺼리다 보니 영화관
이나 마트에도 손님이 없고 식당 회식
도 줄어들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
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줄 리 만무
하다.



악플을 달았다. 응원해주는 고객도 있지만 식당 주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고객들을 만나면 난감은 ‘후!’ 그놈의 별이 뭘지! ‘라며 한숨을 쉬었다. 배달을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나서야 악플에 어느 정도 둔감해졌다.

식당을 살리기 위한 지구력으로 배달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배달 초기라 광고비도 많이 들고 배달업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꽤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장사다. 배달앱도 장사가 곤두박질쳐도 임대료를 한 푼도 안 깎아주고 포박과 박자라는 건물주 노릇을 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과 식당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장사를 해도 그 힘든 노릇의 대가를

가게가는 건 바로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다.

요즘 가는 곳마다 임대를 써 볼만
곳이 수두룩하다. 자영업자들이 높은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와 직원 인건비
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부대방으로 돌아갈
까.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빈 점포가 늘어나면 건물주에게도
피해가 간다. 문을 닫는 점포가 한두
개라면 모를까, 수백, 수천, 수만이라
면 지역 경제, 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
을 주게 된다.

최근 전북 전주에서는 ‘착한 임대
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코

토나19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줄자 매출이 떨어진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팔을 걷어 부쳤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주시장은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참여는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공실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도 크게 칭찬했다.

장사가 바닥을 치는데 높은 월세를 감당 못해 폐업이 늘어난단 건물주도 같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가 월세로 힘에 부쳐할 때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 준다면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심심할만한 말이 있지 않은가. 이 경제 방하기의 임대료 인하는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건물주도 같이 사는 길이다.

같이 잘 사는 길, 상생만이 자연업
대란을 막아낼 가장 강력하고 파스하
고 아름다운 무기다. 언젠가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고
파스한 봄은 꼭
올 것이다.



김옥숙(소설가,
경성·부경대
‘백년갈비’ 운영)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문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 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 기본법 § 26)
 - ※ 취득세(구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 25, § 105)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 83)
- **(무방문 신고납부)** 대면접촉을 통한 전염병지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의 전자신고 납부 및 유선, 팩스 등을 통한 신고납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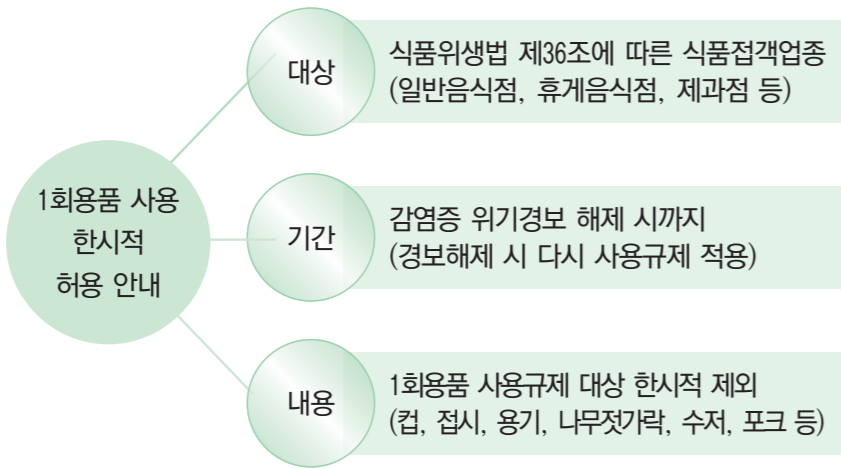
〈무방문 신고납부 세목별 문의처〉

- 부동산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051-607-4191~6
-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업원분 주민세 ☎051-607-4942~5
-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051-607-4251~5, 607-421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한시적 허용 안내

감염병 재난에 대하여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물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사항을 안내합니다.



※ 가급적 고객이 직접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대 시책

☒ 첫째,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습니다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

☒ 둘째,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습니다



- 국가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3% → 1%
- 지자체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5% → 1%

☑ 셋째, 공공기관(103개)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습니다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안내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상) 외식업체• (규모) 100억원• (내용) 외식업체 운영자금(5억원, 1년), 시설자금(1억원, 5년), 금리(고정 2.5~3.0%, 변동 선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200억원• (대상) 신용 CV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용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규모) 200억원• (대상) 신용 CV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용자지원, 금리 1.75%(고정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규모) 4,400억원• (대상) 자선용(6등급이하), 저소속(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기중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요청을 제외한 전통시장•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특별자금지원• (규모) 1,000억원• (대상) 신용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특별보증 프로그램• (규모) 1,000억원• (대상) 신용 CV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를 0.8% 적용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특별보증 프로그램• (규모) 1,000억원• (대상) 신용 CV 피해 기업•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를 상향(85%~95%), 보증료를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규모) 3,000억원• (대상) 신용 CV 피해 중소기업•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를 상향(85%~95%), 보증료를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 *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차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세, 부가기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6개월)채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 (3번→2번)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채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남구 세무1, 2과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공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기연장, 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과,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카드	<p>피해 우려 영세, 중소기업청(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권 분할결제 등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외기업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부산광역시 지원 사항 안내

-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관광, 행사, 축제 등 코로나 피해업체 우선지원
 - (대상) 부산소재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
 - (규모) 4,000억원 업체당 1억원 한도
 - (내용) 보증료를 0.7%, 이차보전 0.8%(창업 3년 미만 1.7%)

■ 부산은행 연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5년)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피해기업 금리감면
- (신규특례보증) 직·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1~10등급까지 지원 >(규모) 1,000천억원/(특례) 보증료를 0.5%, 이차보전 1%→적용금리 1.5%~1.7%

■ 피해신고센터 : 부산경제진흥원 피해지원센터 051-600-1713~6
부산상공회의소 피해지원센터 051-990-7063~6